

요약

아세안+3 국가 구성한 EAVG II 는 2020년까지 아세안+3 에 기반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2001년에 발표된 EAVG I 보고서가 이후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EAVG II 또한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과 충돌하면서 보고서는 비전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충실한 감이 있다. 따라서 두번의 EAVG를 제안했던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EAVG II 프로그램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중재자로서 아세안의 성실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제어: EAVG II, 경제협력,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경제공동체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I. EAVG II의 배경과 의의

동아시아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이 구성한 동아시아비전그룹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EAVG II)은 약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12년 11월 “EAVG II 보고서: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실현(The East Asia Vision Group II Report: Realis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by 2020)”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2001년 작성된 EAVG I¹⁾ 보고서(EAVG 2001)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향하여: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가 이후 10여 년간 동아시아 질서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EAVG II 보고서도 아세안 +3의 노력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의 중간 단계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선발국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으로 인한 버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동남아 수출경쟁력의 하락, 국제금융 자유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 등의 문제로 1997년 태국을 필두로 동아시아는 전례가 없었던 외환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동남아에 먼저 큰 충격을 주었고 위기가 한국까지 상륙하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단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태국에서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 및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단순한 거시경제의 불균형 현상이자 동아시아의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했다.²⁾ 아세

1) 1999년에 구성된 EAVG는 당연히 연속적인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EAVG I로 명명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EAVG II와 구분하기 위해서 EAVG I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2) 태국정부의 요청으로 1997년 8월 5일 172억 달러에 달하는 IMF 주도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원에 나선 기관은 IMF,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의 세 곳이었으며,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였으며, 미국은 지원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IMF의 프로그램도 성장을 하향 조정, 경상수지 적자 축소, 재정수지 균형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안은 외환위기를 다룬 1997년 12월의 비공식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을 초청했고 이로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는 정례화 되었다. 다음해인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EAVG I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EAVG I는 1999년 10월 제1차 회의 이후 2001년 5월 제5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200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이미 아세안+3 국가들은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발표하여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더해 EAVG I 보고서는 아세안+3에게 비전과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세안+3을 하나의 지역체제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했다. 즉 EAVG I으로 인해서 아세안+3는 장기적 지향점 혹은 비전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EAVG I 보고서는 공동체가 협력과 개방에 기초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정의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³⁾ 대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 방지와 평화 증진 및 무역, 투자, 금융, 개발 분야에서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 환경 보호와 건전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인간 안보 진전,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의 협력 강화로 공동 번영 추구,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EAVG I 보고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시 한국의 제안으로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EASG)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비전보고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17개의 단기 및 9개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EASG 2002). EAVG I와 EASG의 중장기 프로그램에는 실물 협력에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와 동아시아투자지역(EAIA : East Asia Investment Area) 설립, 금융

3)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에 대해서 보고서의 제목은 대문자 C를 쓰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소문자 c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세안+3 국가들이 공동체의 정의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에서 아시아통화기금을 상징한 지역금융협력체(a regional financing facility) 설립, 제도적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설립 등 아세안+3의 경제 및 정치 질서를 변화시킬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다.

당시 아세안+3의 협력수준에 비해 EAVG I -EASG 보고서의 비전과 목표는 원대했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낙관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회원국들은 제시된 프로그램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금융협력체 설립은 EAVG I가 발족하기 전에 아세안+3 재무장관들이 진행시킨 창마이 이니셔티브(Changmai Initiative: CMI)를 담은 것이었고 이는 외환위기 직후 일본이 제기한 아시아통화기금(AMF) 안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EAFTA나 EAS 등은 당시의 수준으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부, 특히 단기 협력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되었으나 중장기 협력 사업 특히 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 보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기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이 EAFTA의 연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아세안+3차원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EAS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중국의 주도에 대응하여 일본은 EAFTA에 대해서는 아세안+6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을 제안했고, EAS도 역시 아세안+6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EAFTA와 CEPEA는 병행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EAS에 대해서도 아세안측은 아세안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면서 아세안+6기반의 새로운 EAS가 탄생했다. 특히 EAS는 아세안+3이라는 다소 불균형적이고 비공식적인 정상회의를 13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무대로 만들기 위해 한국이 야심차게 제안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세안+6이 참여하는 EAS로 바뀌었으며 기존 아세안+3 회의 장소, 즉 아세안에서 병렬적으로 열리는 반쪽짜리 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편 아세안+3 체제 출범 10주년을 맞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는 과거 10년간(1997~2007)의 아세안+3의 협력을 회고하고 향후 10년간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ASEAN +3 Summit 2007). 공동성명은 아세안+3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며 그 중에서도 아세안이 중심 추진자(driving force)라고 인정했다. 제2차 공동성명은 EAVG I 및 EASG에서 제시한 큰 줄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아세안+3의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아세안+3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회원국 모두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예컨대 EAFTA가 현실적으로 곧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는 없었고, 이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AFTA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주장되기도 했으나, 장기 과제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한 EAVG II는 EAVG I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10여년의 비전을 마련해야 했다. EAVG II의 구성 배경에는 EAVG I에서 보여준 한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대내외 환경변화로 통합보다는 갈등기조가 확산되는데 대한 한국 내 동아시아학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들은 EAVG I 이후 10년이 경과했으며 한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에 EAVG II의 추진을 건의했고, 한국정부가 이를 아세안과 중일 정부에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당시 중국, 일본, 아세안이 각각 약진을 하며 미국이 강력하게 동아시아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EAVG II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자체는 아세안+3가 2020년까지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EAVG II의 주요내용과 이를 제시한 한국이 향후 아세안+3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 것이다. II장에서는 EAVG II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아세안+3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그리

고 IV장에서는 특히 아세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V장은 맺음말이다.

II. EAVG II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협력 전망

1.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설립 제안

EAVG II는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뿐만 아니라 부문간 협력(cross-sectoral)을 새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EAVG II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EAVG I이 제시한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설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⁴⁾ EAEC는 4개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① 시장 및 생산기지 단일화, ② 금융시장의 안정, 식량·에너지 안보, ③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④ 세계경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이다.

이들 EAEC의 기초 분야는 다양한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의 창설 목표는 역내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추진이며 이를 위해서 EAVG I 이후 논의가 진행되었던 EAFTA나 CEPEA 대신 아세안이 제시한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동아시아 인프라투자기금 설립방안을 연구하도록 권고하여 저개

4) 물론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한중일은 경제공동체가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를 바랐지만 아세안 측에서는 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경지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nd remain an inter-governmental entity.” 라고 서두에 못 박고 있다.

발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도록 했다. EAVG I 이후 가장 성공적인 협력 분야로 인정받는 금융협력에서는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대응조치인 CMIM을 다자통화기구로 발전시키는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식량 및 에너지 공급 및 확보를 통해 지역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⁵⁾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는 역내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경지역 경제지대의 공동 개발, 동아시아종합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역량개발 및 구조적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권고했다. 또한 WTO체제를 지원하고 저개발국에 대해 ODA를 확대하면서 동아시아의 세계경제에 기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표 1〉 EAVG II 보고서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관련 아젠다

세부분야	행동계획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추진 - 아시아싱글윈도우를 통한 무역원활화 - 투자환경 개선 협력 - 동아시아 인프라 투자기금(EAIF) 설립 - 한중일 아세안 센터 간의 협력 -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를 규율한 매커니즘 설립 연구
금융안정 · 식량 · 에너지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설립의 유용성 연구 -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 'ASEAN+3 비상 쌀 비축 제도(APTERR)의 확대 - 식량공급 협력 강화(농수산업) - 에너지안보포럼(ESF) 강화 - 천연자원의 공급과 이용 협력 강화
균형 · 지속가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를 통한 LDC 산업역량과 인적자원 개선 협력 - 국경지역개발 - 종합기술연구원(CTRI) 설립
세계경제에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무역체제 발전 기여 - DDA 타결 노력에 기여 - 동아시아 및 세계 전역의 LDC 지원 확대 - 기후변화 협력

자료: *The East Asia Vision Group (EAVG II) Report: Realis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by 2020* (EAVG II 2012).

5) EAVG II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금융협력과 관련된 것이다. 금융협력에서는 CMI가 다자화하여 CMIM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통화기금(EAmf)의 유용성을 연구한다는 데서 그치고 말았다. 유로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한편 EAVG II 보고서는 EAVG I 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문간 협력(cross-sectoral)의 강화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아세안의 연계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체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하고, 재난예방과 관리의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장지대 개발, 빈곤축소 등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정치와 안보 분야로 구분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정치협력에서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UN헌장 등에 명시된 공동의 규범과 규칙준수 및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국방장관플러스회의(ADMM+) 등 여타 역내협의체와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안보협력에서는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확보, 해상분쟁 예방을 위한 지역차원의 행동규칙 제정 등의 협력강화를 촉구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AVG II 는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 노령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인간개발 분야에서 노령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공중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의 강화를 촉구하고,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역내 주요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교육과정 향상 및 역내 교육기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자원 관리, 초국경 환경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술공조 등을 통한 녹색성장개발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정체성 구축 분야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보존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동아시아관 UNESCO 설립을 통해 동아시아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고 동아시아 자원봉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표 2〉 EAVG II 보고서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관련 아젠다

세부분야	행동계획
인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관련 공동 R&D 활동 강화 - 사회보장·보호 매커니즘 협력 - 양극화에 의한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 인구정책 협력 - MNC의 현지경제에 대한 기여 강화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협력 - 아세안+3 대학 네트워크 협력 - 이주노동자의 기술개선 및 관리협력
환경·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시스템 보호 및 환경친화적 개발전략 개발 - 녹색성장 협력 - 임업 협력 - 수자원 관리 협력 - 초국경 환경 문제 협력
동아시아정체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판 UNESCO 설립 - 문화 협력 - 관광 진흥 및 비자제도 개선 - 동아시아 자원봉사단 운영 - 동아시아 미디어 연계 강화 - 동아시아학 강화

자료: The East Asia Vision Group (EAVG II) Report: Realis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by 2020 (EAVG II 2012).

EAVG II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조했다. 아세안 사무국의 기능적 역할 강화 및 한중일 사무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EAVG II 비전의 이행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부, 재계, 학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연결고리로서 EAF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민간분야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기존의 ASEAN+3 협력기금을 확대하도록 했다.

2. 협력 방안 평가

EAVG 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아세안+3 국가들은 아세안+3 협력을 EAVG I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스스로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EAVG II 또한

동아시아 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EAVG II 보고서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강조한 비전보고서가 되었다.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으나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정의나 성격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는 4개의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금융안정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소 혼돈을 준다.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는 경제공동체의 기본이다. 이를 위한 FTA의 경우 기존의 아세안+3 기반의 EAFTA가 아니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는 RCEP를 지향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세안+3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역외 지역을 포함하는 FTA를 추진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금융협력의 경우 금융의 통합 등 보다 진전된 공동체 요소를 추진하기 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었으며 그것도 CMIM의 현재 진전 상황에 비해서도 극히 소극적인 EAmf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정도로 퇴보하였다. 특히 동아시아통화기금(EAMF)도 소문자(An East Asia monetary fund: EAmf)로 합의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EAEC 추진을 담보할 만한 확고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비전 실행을 위한 매커니즘 고려 및 연구 필요성'만 제시하는데 그쳤다. EAEC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EAVG II 보고서는 한국이 당초 기대했던 경제통합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라는 이상을 담지 못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 유럽에서의 재정위기 등이 반영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상보다는 현실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AVG II 보고서가 담대한 비전보다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인정한 보고서가 된 중요한 배경에는 아세안의 소극적인 자세와 중국 및 일본의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세안은 EAVG II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아세안+3에 한정된 조직화 혹은 기구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EAEC에서 대문자 “C”의 Community가 아닌 소문자 “c”의 community를 원했다. 아세안은 최종적으로 대문자 C의 Community를 수용했으나 보고서에서 각주로 EAEC가 정부간 존재(East Asi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nd remain an inter-governmental entity)이고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주장해 관철시켰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할 무역통합에 대해서도 아세안+3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3 기반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대신 역외국가가 포함되는 RCEP를 주장하여 관철시켰으며, RCEP의 작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 조정기구의 설립도 “적절한 매커니즘을 연구”한다는 선으로 후퇴시켰다.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진행 중인 CMIM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구화에 반대했고, 역내의 환율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 설립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한국이 강력히 주장한 경제공동체를 규율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대해서도 ‘비전 실행을 위한 매커니즘 고려 및 연구 필요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아세안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출발했다. 그 하나는 EU에서의 경제문제였다. EU 경제위기가 유로화(EURO) 화의 취약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금융부문의 협력강화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다.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진전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도적 역할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세안은 아세안+3 기반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창설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지 않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나아가 아세안은 보고서에서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central role of Asean)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과거 동아시아 협력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아세안은 아세안의 중심성(ASEAN Centrality)강조를 위해 아세안 중심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아울러 강조하고 동시에 여전히 아세안사무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의 현실 중시론도 보고서가 비전보다는 현실을 강조하는데 일조했다. 중국은 3차 동경회의에서 EAFTA, AMF 등에 기초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2020년까지 창설한다는데 동의했다. 대신 한국이 초안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인권기구 설립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양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영토분쟁을 감안한 듯 소극적으로 해양의 개발, 보호 등 단순화한 협력을 요구했다. 4차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한중일과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아세안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더 이상 EAFTA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RCEP을 수용하였고 아시아통화단위(ACU)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입장을 같이했다. ACU의 경우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의 갈등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미국이 복귀하고 있으며 일본이 중국의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형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였다.

일본도 3차 회의에서 EAFTA 및 AMF 등에 기초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창설에 찬성했고, 동아시아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주도해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세안을 견제할 의사는 없는 것 같다. 이는 그 동안 일본이 EAVG I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프로젝트였던 EAFTA 및 EAS에 대해 반대하면서 CEPEA와 신(新)EAS를 부각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아세안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었다.

3. 아세안+3 협력의 전망

EAVG II 보고서의 작성과정과 최종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조직이나 기구로 전환하는 데는 모든 나라가 주

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세안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아세안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은 현실론 위에서 동아시아협력이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세안 입장 우선"에 동의하였다. 일본 역시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EAVG II는 EAVG I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통합이나 정체성 확립에 파급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EAVG I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은 외환위기 직후여서 아세안+3 국가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EASG을 구성하여 비전을 정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EAVG II의 경우 세계적 경제위기 과정에서 출범했으나 그 위기가 역외지역에서 발발하면서 동아시아 자체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었다. 역내의 주요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한중일 3국의 권력교체기에서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내외부의 갈등요소가 더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에 접근하자 미국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EAVG I 발표 이후 설립된 EASG와 같은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EAVG II 보고서가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 추진을 선언했지만 공동체 추진에 대한 아세안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경제공동체의 정의나 내용이 모호하여 추진 과정에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에도 다소 부족해 보인다. 경제공동체의 기본적 성격은 시장의 통합, 금융의 협력, 균형발전을 축으로 해야 하지만 EAEC의 경우 시장통합과 균형발전은 강조했지만 금융협력에서는 현재의 진전 상황까지도 부정하는 듯한 제안을 하고 있다. 시장의

통합에서도 근간이 될 자유무역지대가 동아시아(아세안+3)가 아닌 비동아시아지역(인도, 호주, 뉴질랜드)을 포함하여 추진의 동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 인가 하는 우려 또한 있다. 또한 EAEC의 한 요소로서 식량 및 에너지안보 협력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경제공동체의 한 구성요소로서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정합성의 문제도 있다.

Ⅲ. 향후 대 아세안+3 정책 방향

1. 아세안+3 협력의 의미

한국에게 아세안+3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아세안+3이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라는 점이다. 현재 아세안+3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의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아세안+3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소득격차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화와 함께 국내 제조환경이 취약해지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또는 현지 시장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업의 해외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도 줄어들 것이다. 아세안+3에 국한해서 보면 한국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기반이 강화되면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⁶⁾

6) 일반적으로 무역은 서로 다른 상품이 교환되는 산업간 무역과 동일상품군이 거래되는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된다. 산업내무역중에서는 상품에 대한 기호의 차이, 기술의 차이를 반영하는 제품차별화에 의한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동일상품군의 부품과 완제품 간의 거래로 나타나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있다.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은 역내 선진국인 일본, 한국 등의 직접투자 로 인한 부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많다(박변순 2010).

둘째는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이나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아세안+3 어느 당사국도 이를 주도해서 추진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한국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아세안+3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맹주는 일본이었고 적어도 아세안 일부국가와 일본은 무역투자에서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일본, 한국, 아세안 모두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보다 오히려 중국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통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정부의 미국도 경제회복을 위해서 제조업을 재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의 문들 두드리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복귀를 천명하면서 일본과 연합하여 동남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형식적으로 현재 아세안+3 경제통합의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세안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뒤에 실린 무게에 비해서 배기량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대아시아 교역은 가장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수입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각국의 수입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즉 2012년 중국의 수입은 4.3% 증가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8.6% 감소한 반면 대한민국 수입은 전체수입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 증가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도 2012년 10.2%가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의 총수출이 1.3%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외에 개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시장을 통합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 수는 없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이 주

도적으로 제도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아세안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통합을 선도할 의사는 없다. 미국은 역외국으로서 동아시아 통합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갈등의 주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에 따라 중국, 일본, 아세안 모두를 설득하여 적어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케도이탈을 방지 하는 것에는 기여할 수 있다.

2. 아세안+3 경제의 현황

한국의 대 아세안+3 협력 정책 방안을 보기 위해서는 아세안+3의 경제 상황, 특히 대외경제협력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3 경제의 특성에서 역내 경제공동체 추진의 필요성이나 한국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세안+3 경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특히 아세안의 경우 대외지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을 대폭 개선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 기간의 1인당 소득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빠른 나라는 없다. 2000-2011년 기간 한국의 실질소득은 1.47배 증가했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3국을 제외한 중견 아세안 국가들의 소득증가율은 대부분 한국에 비해 낮았다. 한국보다 실질소득이 더 빨리 증가한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2000년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인도차이나 3국도 저개발 단계에서의 개방효과 때문이다. 2005-2011년 기간에도 중국과 한국은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3국외에는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세안 중견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⁷⁾ 즉 아세안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기피, 혁신역량의 부족과 기술흡수 능력 부족으로 중진국 함정 탈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표 3〉 동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소득(2005년 PPP 기준)

(단위: 달러, %)

	1995	2000	2005	2008	2011	2011/ 1995	2011/ 2000	2011/ 2005
한국	15,761	18,730	22,783	25,517	27,541	1.75	1.47	1.21
중국	1,849	2,667	4,115	5,712	6,816	3.69	2.78	1.80
일본	28,026	28,889	30,441	31,323	30,660	1.09	1.06	1.01
싱가포르	32,880	38,063	45,374	48,160	53,591	1.63	1.41	1.18
인도네시아	2,711	2,623	3,102	3,570	4,094	1.51	1.56	1.32
말레이시아	9,129	10,209	11,544	12,942	13,672	1.50	1.34	1.18
필리핀	2,527	2,697	3,051	3,382	3,631	1.44	1.35	1.19
태국	5,691	5,497	6,675	7,378	7,633	1.34	1.39	1.14
베트남	1,231	1,597	2,161	2,611	3,013	2.44	1.89	1.39
캄보디아	811	1,035	1,508	1,898	2,080	2.56	2.01	1.38
라오스	1,114	1,355	1,695	2,041	2,464	2.21	1.82	1.45

자료: World Bank DB

둘째, 동아시아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및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지향적 성장의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보다 2011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아세안의 무역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태국, 베트남의 대외의존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무역의존도는 수출부문의 빠른 성장과 비수출부문의 낮은 성장으

7) 지저스 펠리페는 세계 53개 개도국의 중진국 함정 여부에 대한 연구에서 2010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저중진국함정(lower 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있고, 말레이시아는 고중진국함정(upper 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곧 고중진국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곧 함정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Felipe 2012).

로 인한 발전격차를 낳고 있다. 그러나 수출부문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서 동시에 경쟁을 함으로써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어 중간 기술을 가진 국가들의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균형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자기 수출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우 민간소비자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산 및 소득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여 동아시아의 실질생활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표 4〉 동아시아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8	2010	2011
한국	49.9	49.0	62.4	64.6	92.0	87.9	96.7
중국	29.6	38.6	39.6	63.0	56.7	50.1	49.9
일본	17.0	14.6	18.2	24.3	31.9	26.6	28.5
인도네시아	41.5	42.6	58.0	50.1	52.2	41.4	45.0
말레이시아	133.3	170.5	192.1	178.3	153.6	146.9	144.0
필리핀	47.9	62.0	88.7	88.0	62.9	53.3	48.1
싱가포르	291.3	278.6	289.1	342.8	345.1	291.0	298.1
태국	63.5	75.3	104.1	121.2	122.3	111.3	123.0
베트남	79.7	65.6	96.6	130.8	157.4	147.6	164.6

자료: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2 (ADB 2012).

셋째, 외형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아세안+3의 역내 수출비율은 크게 증가해 역내시장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기저의 중국효과 때문에 실상이 과장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아세안의 역내수출비율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8.7% 포인트, 일본 14.7% 포인트, 아세안은 5.7%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3 전체의 역내수출 비중은 33.8%에서 35.5%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2001년 28.6%에서 2010년 20.7%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에 따라 한국, 일본, 아세안이 모두 중국에 부품과 부분품을 수출하거나 자본재를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종제품을 동아시아 보다는 역외지역으로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의 역내 수출은 한국, 일본, 아세안이 중국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이들 상호간의 수출은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본, 한국에게 아세안은 중간재나 소재의 중요한 시장이지만 아세안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수출은 주로 원재료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시장통합은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非중국 지역의 경제통합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에 역외시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내교역비율을 NAFTA 및 EU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동아시아 역내에서 대규모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표 5〉 동아시아(아세안+3) 국가의 수출시장

(단위: %)

	미국			중국			동아시아		
	2001	2008	2010	2001	2008	2010	2001	2008	2010
한국	20.8	11.0	10.6	12.0	21.4	25.1	33.8	39.6	42.5
일본	30.4	17.7	15.6	7.7	16.0	19.4	27.4	36.8	42.1
중국	20.4	17.7	17.9	-	-	-	28.6	20.9	20.7
ASEAN	17.9	10.6	9.6	4.3	9.0	10.8	44.2	49.3	49.9
동아시아	23.0	15.0	14.3	7.0	13.9	16.6	33.8	34.4	35.5

자료: IMF 무역통계를 이용 필자 작성

3. 동아시아의 중재자 역할 강화

(1)

동아시아 경제현황을 고려할 때 실질소득개선을 위해서는 교역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아시아의 수출상품은 대량생산된 범용 제조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대부

분의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유사한 상품을 수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는 상품을 개발하고 과잉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즉 실질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동아시아는 대외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소득탄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의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결정력을 회복시켜 교역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실질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동시에 동아시아 내부에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의 중국을 통한 역외지역에 대한 수출은 중국이 부품, 소재, 자본재 산업을 육성할 때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무역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일본 및 한국과 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수평적 산업내 분업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와 같은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형 수직적 분업이 아닌 중국과 동아시아가 최종 시장이 되는 다품목에 의한 수평적 산업내 무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무역이 창출될 수 있고 교역조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역조건 개선이나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창출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내부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장벽 제거의 방법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EAVG II는 아세안+3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 EAFTA 대신 RCEP를 권고하고 있고 아세안+6 국가들은 2013년 5월 제 1차 RCEP 협상을 개최했다. RCEP는 동북아-아세안-인도로 연결되는 아시아 회랑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동북아-동남아 간의 산업분업을 인도까지 연결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와 호주를 동아시아 경제권에 편입시키면서 동북아는 필요한 자원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RCEP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동북아, 아세안 그리고

인도 및 대양주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경제나 아세안+3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조기에 RCEP을 창설할 수 있다면 한국은 기존에 발효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RCEP이 수준 높은 FTA로 발효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RCEP을 추진하는 아세안은 내심 기존에 아세안이 체결한 5개의 아세안+1 FTA⁸⁾를 변형시켜 통합하는 형태를 가져가되 기존 5개의 ASEAN+1 FTA 및 RCEP 참여국간 쌍무적 FTA를 그대로 두려는 것 같다. 아세안+1 FTA의 개방 수준은 모두 틀리며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을 한국과 일본조차도 추가적인 개방을 위해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하고 있다. RCEP이 실효적인 FTA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아세안+1 FTA들 보다 더 수준 높은 개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RCEP이 기존 FTA들에 비해 수준이 더 낮다면 필요 없는 FTA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국가의 행정력 수준에 따라 오히려 무역비용만 더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면 RCEP은 아세안+3 혹은 아세안+ 6 지역에 있는 수많은 FTA가 창출하는 소위 국수그릇효과(noodle bowl effect)를 줄이지 못한다.

RCEP의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RCEP에서 인도는 중요한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가 향후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인도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공산품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은 어려울 것이다. 인도는 2011 회계연도에 수출 3,098억 달러, 수입 4,995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수출의 60%를 상회했다. 국가 전체로도 무역수지 적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제조기업 입장에서라도 개방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특히 중국과 같은 FTA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8) 아세안-한국, 아세안-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인도 그리고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이다.

서비스 산업에서도 동일하다. 서비스업에서도 IT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2015년까지 RECP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협상비용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외부세계의 개입도 RCEP의 추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2013년 초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을 하고 있다. TPP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소규모 개방국가 4국이 시작한 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참여하면서 성격이 크게 변했다. 2013년 6월 현재 동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이 TPP 가입을 위해 협상중이다. TPP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지만 앎으나 TPP는 중국을 포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TPP의 진전은 아세안+3 체제의 통합 진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⁹⁾

한편 RCEP이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체로서 조기 출범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일 FTA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발전이 높고 대외적으로 경쟁이 심한 3국 FTA를 통해 대외적으로 교역조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역내의 산업분업을 촉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가 한중일 F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한중일 FTA는 아세안과 인도에 자극을 주어 RCEP의 조기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향후에도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과의 분업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면 한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중일 FTA로 동북아 지역의 생산 및 소비효율성

9) 일부에서는 중국도 TPP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TPP가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참여하기 곤란하고 중국이 세계 다자무대에서 개도국들의 대표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협정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이 높아지면 아세안과 인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인도는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여 중국에서 이탈하는 노동집약적, 수출형 산업의 일부를 흡수 가능하다.

(2)

동아시아가 아세안+3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세안+6이어야 하는가는 이미 오래된 질문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다. 즉 EAVG II가 RCEP을 아세안+3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 아세안+6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력과 기존 동아시아와 인도의 경제발전 격차를 고려하면 아세안+3은 여전히 한국이 가장 중시해야할 지역이다.

2000년 이후 아세안+3 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놓고 역내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동북아에서는 특히 아베정권 등장 이후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한일, 중일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아베정권은 엔화의 가치하락 정책을 통해 소위 “인근 궁핍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있고, 일본과 한중 양측의 갈등은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다. 아세안에서의 갈등도 덜하지는 않다. 중국, 일본, 미국은 각자 국익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아세안 역시 외부 강대국이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약소국은 선택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 안보의 위협요소로 인식되는 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일부 중진국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시장과 미국주도의 세계무역 체제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또

한 아세안+3 체제의 통합 진전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큰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3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이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 안보면에서 한국이 갈등의 중재자 교량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에서 중재자 혹은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EAVG II 에서 제시된 관련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남아 낙후국가의 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EAVG II 가 강조하는 동아시아중합기술연구원을 동남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역내에서 재원출연을 주도하고 운영매뉴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AVG I 이후 한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포럼(EAF)은 산·관·학이 참여하는 모임이었지만 그 동안 동력이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EAVG II 에서는 EAF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고 시민사회(NGO)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점에서 한국은 EAF가 더욱 확실하게 작동하고 동아시아 통합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상설사무국을 만들고 연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은 아세안+3 국가의 동의를 얻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부설로 설치하거나 한시적으로 대학연구소에 위탁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적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EAVG II 가 제시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3의 시민사회 혹은 지식계에 한국의 사회 문화적 역량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개발(Human development)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거나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교육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동아시아학(East Asia Studies)의 진흥, 아시아관 UNESCO 설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 간에 제도

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세안+3 유니버시티 네트워크 구축, 관광객에 대한 VISA 면제 추진, 동아시아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미디어 협력 등이다.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전략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역내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개발, 글로벌 가치에 대한 존중 등에서 역내 국가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IV. 대아세안 협력 정책

1.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

한국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창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적인 바와 같이 아세안의 경제력이 비록 크지 않지만 아세안에서는 주요 강대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 과정에서 아세안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둘째는 동아시아 내의 역학 구도 상 아세안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주도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아세안의 동의 없이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EAVG II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세안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도 마지못해 찬성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형성 과정에서 여전히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셋째는 한국은 동남아와 오랜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기업은 동남아에 투자를 시작했고, 관련 중간재나 소재를

수출함으로써 동남아는 한국의 주요한 시장이 되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791억 달러로 한국 총수출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¹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잠재력이 큰 국가들의 경기호조, 미얀마의 개방은 한국에게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아세안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못하다. 한국동남아연구소(2010)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문화역량의 확대로 동남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또한 동남아 선발국과 후발국의 대한국 인식의 차이도 크다. 선발 동남아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한국의 호감도는 주변국들 중에서 일본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러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높다. 선발 아세안국가들의 호감도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적 교류, 세계적 평가 등으로 판단되고, 후발 아세안국의 경우 한국의 대중문화가 호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2008년 동남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동남아인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중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인가라는 조사에서 아세안 인구의 약 30%가 중국을, 28%가 일본을 선택한 가운데 한국을 선택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일본과 오랜 경제교류관계를 갖거나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들은 특히 한국이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싱가포르), 1.1%에 불과(말레이시아) 했다.

10) 2013년 5월말 누계기준으로는 대아세안 수출은 349억 달러로 총수출 2,300억 달러의 15.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 581억 달러 25.3%보다는 작지만 미국 261억 달러 11.0%, EU 207억 달러 8.7% 그리고 일본 143억 달러 6.2%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 아세안 시장은 한국에게 중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2대시장이 된 것이다.

〈표 6〉 동남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

(단위: %)

	호감도 1위 비중(5국 중)			방문희망 1위 비중(5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26.5	11.7	26.7	26.5	13.2	26.0
캄보디아	52.8	9.1	13.9	53.2	8.5	12.1
인도네시아	16.7	8.7	48.1	17.1	8.9	45.3
라오스	58.4	5.6	21.3	53.6	8.6	15.5
말레이시아	18.4	11.8	33.2	18.5	12.1	33.8
미얀마	54.1	5.9	25.3	56.3	5.2	23.5
필리핀	16.2	6.0	37.7	17.8	5.6	32.6
싱가포르	12.0	14.9	35.6	14.4	14.7	40.1
태국	24.2	19.5	33.8	26.1	19.1	31.2
베트남	25.6	11.5	28.3	28.4	18.0	30.1

주: 5국은 호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자료: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표 7〉 동남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전체	2.0	29.7	28.0	23.3	3.4	2.3
싱가포르	0.0	57.8	3.6	22.0	2.7	2.9
말레이시아	1.1	39.2	25.8	10.6	5.4	1.7
태국	1.4	42.7	25.3	13.0	2.9	1.7
인도네시아	3.9	12.8	37.9	22.3	2.6	5.8
필리핀	2.8	8.6	32.7	45.0	4.2	0.9
베트남	2.8	16.5	42.7	27.5	2.4	0.5

자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 외무성은 또한 미래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결과는 중국이 일본과 격차를 벌리면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일본보다 약 11% 포인트 차로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4국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아세안 6국 인구들은 한국을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식도가

가장 높은 베트남에서조차 여전히 7.6%로 10%에 미달함으로써 아세안에서 한국의 위상은 아직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았다.

〈표 8〉 미래 아세안의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인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전체	5.1	33.4	22.6	13.4	6.1	5.2
싱가포르	1.9	48.2	4.0	3.1	24.3	5.5
말레이시아	7.5	39.6	19.1	3.2	7.9	7.7
태국	4.1	56.5	18.5	6.0	2.2	3.4
인도네시아	4.9	18.9	29.0	19.1	0.9	3.2
필리핀	4.5	14.9	33.2	26.4	0.1	7.2
베트남	7.6	21.7	32.2	22.7	1.0	4.1

자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으며 미래에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분명하지 않았다.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킨데 기여했던 김대중 정부는 아세안을 동아시아 전체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록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지만, 정부가 동북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아세안 정책은 더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정책에 아세안을 포함했지만 이 또한 국제 자원가격 앙등(昂騰)에 따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실리적 목적에서 나온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는 일본과 중국이 아세안과 개최한 정상회의를 뒤따라 간 것에 불과했다. 즉 한국의 아세안 정책은 FTA나 정상회의 등 일본과 중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측면이 강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재원동원력도 취약하고 ODA 규모에서도 지원 규모가 극히 작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을 따라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아세안에 감동을 주기 어렵다.

2. EAVG II 이후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방향

(1)

한국과 아세안은 2004년 11월 정상회의에서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2005년에는 종합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FTA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Korea-ASEAN 2004; 2005). 2009년에는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제안한 아세안-한국 현인그룹 보고서가 발표되었다(ASEAN-Republic of Korea Eminent Persons Group 2009). 이 보고서는 아세안-한국 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격시키고, 소위 FEEL(Fellowship, Education, Environment, Liberalised Trade) Asia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선언이나 협상은 양측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중장기 아세안 전략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장기 대아세안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아세안+3 체제 내에서 한국이 “아세안의 편”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아세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보다 근원적, 철학적, 장기적인 통상외교 정책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자신의 전략이어야 한다.

전략 속에 포함될 경제적 전략과 관련해서는 3개의 측면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아세안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아세안은 2015년 말까지 아세안공동체를 실현시킬 계획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박번순 2010). 아세안공동체에 가장 큰 장애는 아세안 국가 간의 개발격차 확대이다. 개발격차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회원국 모두 일시에 채택하는 것은 힘들고 많은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개발격차로 인해 아세안의 정체성 함양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외교는 동남아의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

어야 하며 국가 간 격차뿐만 아니라 한 특정 국가 내에서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비교우위는 먼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아세안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처럼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를 살 필요도 없으며 일본과 같이 기존의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한국은 중규모 국가, 중간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인 아세안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더 적용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신흥 문화강국으로서 역동적 잠재력이 크다. 이는 아세안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세안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최종 목표로 고려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아세안이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 존재하기는 곤란하다. 즉 현재 아세안의 역내수출비율은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와의 상호작용은 아세안 경제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대아세안 전략을 수립할 때는 바람직한 동아시아 통합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동남아-인도(서남아)로 연결되는 아시아 회랑까지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2)

그렇다면 한국은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 우선 아세안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상품을 개발하고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규모는 일본의 대아세안 무역 규모보다 적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86억 달러, 2012년 272억 달러

로 일본의 2011년 18.7억 달러의 적자나 2012년의 1.9억 달러의 흑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흑자는 지속되고 있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2010년을 제외하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표 9〉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9.6	13.7	56.4	83.7	69.3	91.0	186.8	271.7
일본	88.9	30.0	0.9	-33.2	25.1	118.4	-18.7	1.9

자료: 한국통계는 무역협회 DB, 일본통계는 일본 JETRO DB.

한국과 일본은 모두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자원부존 여부가 한일 양국의 대아세안 교역패턴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원수출국에 대한 일본의 적자는 한국의 이들에 대한 적자보다 훨씬 커서 일본의 대아세안 전체의 교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 싱가포르 교역에서는 한국 일본 양국이 모두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가 중계무역항 역할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싱가포르를 통해 양국의 부품과 중간재가 다시 아세안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역흑자의 경우 한국은 대 베트남 교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 일본은 대 태국 교역에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에 일본은 태국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에 발생한 결과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한국이 아세안 저개발국 집합인 인도차이나 국가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은 적자거나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한국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국가가 베트남이다. 한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은 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대아세안 무역규모를 확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무

역수지 불균형을 균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수출패턴은 각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투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입패턴 또한 자원수입과 관계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자원을 아세안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상품을 개발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제조업 및 서비스 중심에서 1차 자원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10〉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무역(2012)

(단위: 백만 달러)

	한국			일본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아세안 계	79,145	51,977	27,168	129,788	129,603	-1,874
싱가포르	22,888	9,676	13,212	23,360	8,788	14,572
태국	8,221	5,353	2,868	43,847	23,713	20,135
말레이시아	7,723	9,796	-2,073	17,759	32,975	-15,216
인도네시아	13,955	15,676	-3,652	20,337	32,394	-12,057
필리핀	8,211	3,284	4,927	11,892	9,378	2,515
브루나이	112	1,983	-1,721	188	6,011	-5,823
베트남	15,946	5,719	10,227	10,767	15,139	-4,371
라오스	165	11	154	138	124	14
미얀마	1,331	351	980	1,263	676	588
캄보디아	593	126	467	235	406	-171

자료: 한국통계는 무역협회 DB, 일본통계는 일본 JETRO.

둘째, 아세안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세안이 공업국으로 성장을 해도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자원을 소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아세안의 기술역량은 극히 취약하다.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1년 현재 국가의 R&D 지출이 GDP의 0.03%에 불과한데 이는 오히려

1990년대 후반보다 더 낮은 것이다. 국민 1인당 R&D 비용도 2011년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의 768달러에 비하면 비교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낮은 R&D의 활동의 결과는 상당부분 아세안이 다국적 기업 주도의 경제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 즉 다국적기업들은 아세안을 중저급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같은 기초 R&D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정도의 R&D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낮은 기술역량 문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대부분 동일한 수준이고 CLMV 국가의 경우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기술을 수입해 이를 개량하고 개선하여 독자적인 산업기술 체계를 수립했고 정부, 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집약적인 농업경작기술, 전자산업의 기술, ICT 분야의 기술 등에서 아세안 특히 CLMV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AVG II 에서 제시한 아세안 중진국에 종합기술연구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 개발 원조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인프라 건설 등 하드웨어 보다는 인적 자원육성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중점 ODA지원 대상이고 최근 무상원조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원조 규모는 극히 작기 때문에 유상 중심의 차관공여 보다는 무상 중심의 원조, 그것도 기술개발 관련 원조를 강조해야 한다. 개발경험공유사업(KSP)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하되 아세안 저개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 인력의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의 중소기업부문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지 중소기업의 진흥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KSP 사업에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경험이 일방적으로 전수되지 않도록 양측에서 노력해야 한다.

〈표 11〉 주요국가의 R&D 관련지표

	R&D지출 비율(대GDP)			국민1인당 R&D지출(\$)			기업의 R&D지출(백만\$)		
	1997	2008	2011	1997	2008	2011	1997	2008	2011
한국	2.79	3.21	3.74	296.9	695	768	9,899	25,683	28,375
중국	0.64	1.54	1.84	4.7	50	100	2,702	48,692	101,824
말레이시아	0.20	0.72	1.07	9.0	57	106	142	952	1,745
싱가포르	1.49	2.68	2.23	378.8	1,041	1,142	885	3,619	3,679
태국	0.18	0.22	0.22	4.6	8.9	11	42	211	307
필리핀	0.22	0.10	0.10	1.8	1.8	1.8	3	97	95
인도네시아	0.09	0.05	0.03	1.0	0.6	0.9	95	5	21

자료: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1999; 2010; 2013).

셋째, 아세안의 사회 문화적 역량의 개발에 한국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문화 역량은 아세안이 단기간에 갖출 수 없는 한국의 경쟁우위 요소이다. 아세안에서도 대중문화의 발전은 내수를 확대하여 수출의 존도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에서 한국대중문화 수출(한류)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되 이 또한 상업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세안 자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문화 창조형 한류로 공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문화교류가 쌍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은 형식이 아닌 실천 가능한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개발협력이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한국아세안 FTA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일본-아세안, 중국-아세안 FTA에서의 프로그램 수보다 오히려 더 많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천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경제협력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행을 모니터링 하지만 한국은 이 기능이 취약하다. 아세안과의 협력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더라도 아세안+3의 인구는 2011년 세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21억에 이르고 있다. 시장 환율 기준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전체의 23% 선이다. 아세안+3의 구매력 평가 GDP는 세계 전체의 25% 이상으로 미국과 EU 보다 많다. 이처럼 아세안+3은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며, 성장 잠재력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오히려 더 크다. 더구나 동아시아 지역 내 산업 분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대만과 홍콩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동아시아가 미국 및 EU와 더불어 세계 경제 3극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동아시아가 미국 및 EU에 비해 과편화된 국가들의 모임이므로 세계 문제에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제안으로 발족한 EAVG I 는 이러한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체제로 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EAVG II 또한 한국의 이런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안하여 출범한 연구조직이었다. EAVG II 는 2000년대 동아시아(아세안+3)의 협력을 규율하고 지도했던 EAVG I 에 이어 동아시아 역내외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The New Vision), 즉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을 제안하였다.

EAVG II 를 제안하고 공동의장국 역할을 담당한 한국은 비전작업 과정에서 동아시아가 세계 속에서 더 큰 위상을 갖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동아시아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역내 공동체의 도정을 촉진·강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증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를 위해 보고서 초안에 동아시아 현장, 동아시아경제공동체기

본협정 등을 체결하고(2025년까지), 동아시아 인권기구를 설립하며 아세안 사무국과 동북아 3국 협력사무소의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희망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EAVGⅡ가 출범한 2011년의 동아시아는 역내의 갈등관계가 노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EAVGⅡ 보고서는 한국의 적극적 자세와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일본과 아세안의 자세,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는 중국의 자세가 타협한 산물이다. 비록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 동아시아가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3의 노력여하에 따라 더욱 진전할 수도 있고 제안으로만 그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향후에도 중요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갈등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다. 과거 EAVG를 제안했듯이 계속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로 볼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RCEP을 추진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한중일 FTA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당분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창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아세안 고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이 아세안의 친구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 아세안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

참고문헌

- 박번순 (Park, Bun-soon). 2010. 『하나의 동아시아』(Hana-ui Dongasia). 서울 (Seoul): 삼성경제연구소 (Samsung Gyeongje Yeonguso).
- 한국동남아연구소 (KISEAS). 2010.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Dongnama-ui Hanguk-e Daehan Insik). 서울 (Seoul): 명인문화사 (Myeongin Munhwasa).
- ADB. 2012.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2*. Manila: Asia Development Bank
- ASEAN +3 Summit. 2007.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BUILDING ON THE FOUNDATIONS O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Singapore, November 20, 2007.
- ASEAN-Republic of Korea Eminent Persons Group. 2009. *Report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Eminent Persons Group: Vision for Strategic Partnership*.
- EASG. 2002.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 EAVG.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
- EAVG II. 2012. *The East Asia Vision Group (EAVG II) Report: Realis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by 2020*.
- IMD. 1999.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 Lausanne: IMD
- IMD. 2010.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Lausanne: IMD
- IMD. 2013.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Lausanne: IMD
- Felipe, Jesus. 2012. "Tracking the Middle-Income Trap: What is It, Who is in It, and Why? Part 1."
<http://www.iadb.org/intal/intalcdi/PE/2012/12165.pdf> (Accessed 10 February, 2013).
- Korea-ASEAN. 2004.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Vientiane, November 30, 2004.

Korea-ASEAN, 2005.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Kuala Lumpur, December 13, 2005.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http://stat.kita.net>

IMF DB: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World Bank DB: <http://data.worldbank.org>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

JETRO DB: <http://www.jetro.go.jp/en/database>

ABSTRACT

Korea's ASEAN+3 Cooperation After EAVG II

PARK Bun Soon

Visiting Professor
Hongik University

With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in the last several decades, East Asia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region. The population of the ASEAN +3 in 2011 reached 2.1 billion which was more than 30% of the total world population.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was around 25% of the world's entire GDP. However, due to an export-oriented growth, East Asia has relied on the developed market rather than the regional market. Furthermor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flict among countries made it difficult to cooperate each other in East Asian countries. EAVG I which was initiated by Korea government after 1997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has contributed to formation of East Asia as a regional entity.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e to play the same role, Korea suggested to launch EAVG II which will study the future vision of East Asia for the 2011-2012. EAVG II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East Asia,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EAEC) as the new vision of cooperation in East Asia. EAVG II submitted to ASEAN+3 summit in 2012 Vision report which faithfully reflects a reality, rather than the visionary report due to the major stakeholder's intention of status quo such as China, Japan and ASEAN. Nevertheless, establishment of the EAEC will be depending on the future efforts of the ASEAN+3. In this regard, role of South Korea in the future is important. As a medium sized country with no intention of wielding power, Korea which is relatively neutral in conflicts in East Asia is in a good position to bridge the conflicting parties. As Korea in the past played a

role of idea bank for EAVG, it should continue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the EAEC. Korea should lead the negotiation of RCEP in order to liberalize trade and investment in ASEAN+3 and at the same time should promote trilateral FTA of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ment of the EAEC should be strengthened. Korea should be a true friend of ASEAN. To do this, Korea should formulated and promote a long-term strategy for ASEAN.

Keywords EAVG II, Economic Cooperation, ASEAN, ASEAN+3, East Asia Economic Community(EAEC)